‘드론 신산업 육성’ 한전-전남도 손잡았다

한전 890만기 전신주 좌표 활용
드론 길 구축 등 특화기술 개발
전남도, 테스트베드 등 구축
드론산업진흥협, 도내 투자유치

14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전력ICT와 드론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전남지사, 이효구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한국전력 제공〉

하늘을 지배하는 미래 먹을거리,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4일 나주 빛가람동 본사에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산업인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전력ICT와 드론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은 전력ICT 기반 드론기술 개발, 신산업 추진과 에너지밸리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남도는 드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드론 관련 공동사업과 표준화, 전남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재 드론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7%씩 급성장해 2024년에는 193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국내 시장도 연평균 44%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차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드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화재현장, 해양수색·구조, 생활안전·테러, 섬 물류운송, 농업 등 각종 현장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내에서도 2019년에는 1000억원대를 넘어서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드론의 보급 및 활용 증가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ICT 기반의 무인기 탐지, 식별, 방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범 운영중인 한전의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드론을 결합한 기술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국 890만기 전주의 방대한 설비 좌표를 활용하여 드론 비행항로를 제공하는 드론 길 구축, 전기차충전소와 연계한 드론 무선충전 및 드론 스테이션 구축 등 미래형 특화기술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 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드론 응용 SW 분야 R&D, 기업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고흥만 항공인프라와 드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시험평가·인증·실증 등 원스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전력설비 및 적조감시, 도서지역 택배, 해안선 및 양식장 관리 등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 드론 규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영농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드론 표준화 작업과 한·중·일 국제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회원사 및 무인기 관련기업의 전남지역 투자유치를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환익 사장은 “전력ICT와 드론의 융합은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에 한전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4.40 (-10.03)	⬆ 금리 (국고채 3년) 1.61% (+0.10)
⬇ 코스닥 621.23 (-0.66)	⬆ 환율 (USD) 1171.90원 (+7.10)

효성, 베트남 인프라 투자 협력 논의

발전·건설사업 진출 등

조현준 사장

효성 조현준 사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발전·건설 등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과 신규 투자사업 협력안을 논의했다고 효성이 14일 밝혔다.

조 사장은 “발전소, 아파트, 폐기물처리 시설, 석유화학 등 베트남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ATM·전자결제 등 금융·IT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효성은 베트남내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 이상운 부회장도 “효성 베트남은 2007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투자와 사업 확대를 통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핵심 제품의 세계 최대 생산지이자 핵심거점으로 성장해왔다”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인프라 개발과 확충을 추진하는 등 베트남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반이다.

효성은 2007년부터 호찌민 인근 동나이성 년짝 공단지역에 13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위 제품을 생산해왔다. 년짝 공단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투자기업이다.

특히 효성 베트남은 2014년부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베트남 전체 수출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연합뉴스

중기청, 광주·전남 산학협력 활성화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과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산학연광주지역협의회,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전남협의회는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광주·전남지역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 ▲기업역량 강화 ▲우수인력채용 ▲기술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들은 인적자원과 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 중소기업 기술수요 조사, 기술개발 유망과제 발굴, 기획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환 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술혁신 능력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사업화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아파트 재당첨·1순위 제한 15일부터

‘11·3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승인은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통상 5~10일이 걸린다.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11·3 부동산대책은 ‘당첨됐을 때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당첨받을 수 없는 주택’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연합뉴스

집단대출 규제에 10월 승인액 감소

올 최대 분양에도 두번째로 적어

지난 10월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이 가장 많았지만,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전월보다 줄었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도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2조53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아파트 일반분양은 4만19가구로 올해 가장 많았지만,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적었다.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분양 후 건설사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자들이 앞으로 2~3년간 내야 할 중도금 총액을 계산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이를 승인한 액수다.

잔액 기준으로도 집단대출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한·우리·KEB하나·농협·KB국민·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3101억원으로 전월(110조5501억원) 대비 7600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집단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원 이상씩 늘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승인 증가추세가 꺾인 것은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도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8월과 9월 집단대출 승인 건수는 각각 1건뿐이다. 사실상 신규 집단대출이 멈춰선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집단대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